

제 시민사회단체 72시간 국회앞 집중

노동과 세계 | 승인 2009.12.29 15:51

4대강 예산, 노동관계법 등 법안 국회 본회의(29~31일) 통과 저지 장외투쟁...철야농성, 촛불문화제 등 개최



'이명박 빵꾸똥꾸는 불법 구호?' 4대강 예산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앞둔 29일 오후, 반MB공투본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72시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이명박 빵꾸똥꾸야!"라 외치고 있다. 경찰은 그 후 불법구호 제창이라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명익기자

4대강 예산, 노동관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29~31일)에서 통과여부를 놓고 여여간 '치열한' 대치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반MB공투본, 4대강범대위, 시민주권모임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기간 동안 집회와 농성 등을 벌이는 장외 '72시간 비상국민행동'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추위도, 정부여당의 민의의 배신도 우리의 투쟁을 꺾을 수는 없다"며 △4대강 죽이기 예산 폐기 △서민예산 최대한 증액 △노동관계법 개악 중단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여야 대치와 예산안 처리 지연 문제의 책임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과 이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막대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함에도,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일방적으로 고쳐가면서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또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을 넘어,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악도 계속 시도되고 있다"면서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이렇게 반이성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단 말인가"고 반문했다.

야당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4대강 예산을 밀어붙이면 파괴돼가는 자연은 누가 책임질 것이고, 산별노조 지부 교섭권까지 없어진다면 노조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기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꼭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죽었던 ‘대운하’가 4대강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예수’가 나섰다”고 비유하면서 “국민 8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통과될 경우 지역에 내려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데 있고, 그동안 예산 그 자체를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적은 없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준예산으로 압박하는지는 몰라도 이는 민주당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저지에) 부담 갖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주요일정

-참가단체 : 반MB공투본, 4대강범대위, 2010예산대응모임, 아프간파병반대연석회의, 시민주권모임,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일정

- 29일(화) 촛불문화제(19시)/철야농성
- 30일(수) 기자회견(11시)/노동자대회(15시)/국민대회(18시)/철야농성
- 31일(목) 기자회견(11시)/노동자대회(14시, 수도권)/촛불문화제(19시)
- ※ 30일 3시부터 모든 시민사회단체, 정당 상근 활동가 총파업 및 총력 집중
- ※ 철야는 민주노총 여의도 천막에서 진행(공간 협소 시 민주노총 건물 이용)
- ※ 날치기 강행 시 즉각 규탄투쟁으로 전환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11@nodong.org